

# “반성없이 여전히 뻔뻔...광주의 고통 비해 형량 부족”

전두환 유죄 선고...오월단체·시민단체·지역민 반응

## 헬기 사격 인정 의미 있지만 법정 구속 안돼 아쉬워 역사왜곡 유죄 사필귀정...5·18 진상규명 속도 내야

법원의 전두환(89)씨 선고 재판을 지켜본 5·18 단체와 지역시민단체, 정치권 등은 환영과 아쉬움을 동시에 드러냈다.

우선, 재판부가 전씨의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점, 5·18민 주화운동 당시 광주 상공에서 계엄군의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판단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드러냈지만 형량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이날 오후 진행된 전씨의 재판을 지켜본 뒤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기자회견에서 “법원이 5·18민주화운동의 주범인 전두환에 대해 유죄판결을 했다는 점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 것이야말로 사필귀정”이라며 “전씨가 유죄임을 밝히는 재판부의 판결 내용 하나 하나가 너무나 정확했고 그것은 우리가 모두 받아들이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철우 5·18기념재단 이사장도 “재판부에서 고심을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이 판결문을 통해 드러났다. 전씨 측이 헬기사격이 없었다고 한 것이 왜곡이고 거짓이었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것을 통해 전씨에 대해 실형을 판결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재만 참여자치21 공동대표는 “법원이 쟁점이 됐던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에 대해서 인정된 부분 등 이번 재판은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판결이 발표 명령자에 대한 색출 등 가려지지 않은 5·18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을 하는 데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헬기 사격 여부가 인정된 만큼 향후 5·18 민주화 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5·18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12월 출범한 뒤 재판 결과를 지켜보면서 구체적 활동 계획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에게 선고된 형량에 대한 아쉬운 반응도 적지 않았다. 현행법상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전씨의 행태를 보면 10년의 실형도 부족하지 않다는 게 5월 유가족들의 항변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법정 구속을 요구하던 5·18 희생자 유가족과 시민들은 재판부의 집행유예 판결에 다소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5·18 당시 자녀나 남편을 잃은 ‘오월 어머니’들은 재판을 마친 전씨의 이동을 막기 위해 법원 후문 인근 4차선 도로를 점거하는가 하면, 선고형량(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들은 뒤 “원통하다”며 울부짖었다.

이들은 “아들을 잃은, 남편을 잃은 엄마의 마음은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하느냐”며 “법도 사법부도 우리에겐 없는 셈이다.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하느냐”며 주저앉아 땅을 내리쳤다.

“전씨가 반성하거나 뉘우침이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하면 관대하게 판결해줄 필요가 없었다”는 시민들 반응도 많았다.

이 때문에 지난 10월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개정 법안은 하위사실을 유포,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한 사람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두환 구속 촉구 퍼포먼스

30일 오후 전두환(89)씨 재판을 앞두고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5월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전씨의 구속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조 신부의 법률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는 “재판부가 양형에 있어서 역사를 왜곡한 혐의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지만원과 조현오 전 경찰청장 사건에 견주어 사안을 가볍게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비오 신부도 “쉬운 것은 역사적인 무게와 광주 시민들이 받았던 모독으로 놓고 본다면 너무 아쉬운 형량”이라며 “5·18의 주범인 전두환이 사죄와 회개는커녕 오히려 파렴치한 거짓말을 늘어놓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점을 높고 보면 전씨에게 주어진 형량이 지만원, 조현오 수준에 그친 재판부의 판단이 아쉽다”고 말했다.

문흥식 5·18구속부상자회장은 “재판부가 전씨에게 반성을 주문했으나 오늘 이후 전두환이 반성을 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인정할 거라 기대하지 않는다”며 “전씨가 법정 구속되지 않은 것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정치권도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데 대한 아쉬움과 헬기 사격의 인정 여부에 대한 논쟁을 내고 진상규명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 “반성과 사죄없는 전두환, 중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밝혔고 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이번 판결은 미완의 과제에 남아있는 5·18 진실의 완벽하고도 조속한 규명이 절실하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순간순간 분노 솟구쳐...전씨, 광주시민 앞 무릎 꿇고 사죄해야”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의 소회

### 십자가의 길을 걷는 듯 힘들어 단순 명예회복 아닌 진실 밝혀야

“전씨는 광주시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길 바란다.”

전두환씨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1심 재판을 지켜본 조영대(사진) 신부는 이렇게 말했다. 조 신부는 “단순히 전씨에 의해 훼손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과정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조 신부는 “1심 선고는 40년 전인 1980년 그날의 진상을 규명하는 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신부는 전씨의 회고록 출간 이후, 전씨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찾아온 5·18 기념재단측과 민변측 변호사들 도움을 받아 재판을 시작했다. 가톨릭 사제로서 개인의 이름으로 법적 대응



이정도로 힘들 줄은 몰랐다”고 했다.

재판을 지켜보면서 스트레스도 많아졌다. 광주의 어머니들을 비롯해 5·18당사자들이 재판을 지켜보다 화를 참지 못하고 격분한 모습을 보다가 쫓겨나는 것을 볼 때는 속이 상했고, 진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로 2년 넘게 5-6시간씩 이어지는 재판을 지켜보는 것도 힘들었다.

조 신부는 지난해 3월 광주법정에 선 전씨를 처음

을 할 수 없어 천주교 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를 통해 사실을 알리고 허락을 얻어 재판에 들어갔다.

조 신부는 “너무도 힘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과정”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처음부터 바위에 계란치기인 싸움이라고 예상했지만

으로 분위, 조비오 신부님이 떠올랐다고 했다. 조 신부는 지난 1989년 5·18 국회 청문회 때 증언한 조비오 신부와 비슷한 감정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조비오 신부는 당시 “나에게도 광주시민들이 계엄군의 총에 무차별 쏘려져 갈 때를 직접 목격했을 때,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내손에도 총이 있다면 그들과 맞서 싸우고 싶은 참혹한 상황이었다”고 증언했었다.

분노를 억누르며 전씨의 모든 행동을 빠짐없이 지켜보는 데는 광주시민들과 천주교 사제들의 도움이 컸다고 했다. 조 신부는 “신부님 힘내세요”, “저희가 함께 합니다”고 응원해준 시민들 목소리를 들을 때면 “나 혼자 아니구나”는 생각이 들었고 대주교님을 비롯, 천주교 사제단들이 ‘우리 모두 같이 싸우고 있습니다’고 전해줄 때면 힘을 더 냈다”고 기억했다.

조 신부는 “1심 선고로 전씨가 승복하고 사죄를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조비오 신부님의 조카가 아니라 후배 사제로 회피하지 않고 5월 단체, 민변, 광주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 법정 다소 일찍 등장...재판 중 전씨 강력 질책도

재판부 고심 흔적

전씨 재판을 앞두고 지역 사회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그날의 진실을 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중계방송 요청을 불허했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선고 전 법정 사진·영상 촬영도 허락하지 않았다. 국민들과 공감하지 못하고 기대감을 저버린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터져나왔다.

이 때문인지 재판부는 선고를 앞두고 예정 시간보다 다소 일찍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고 고심했음을 드러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미리 안내 말씀을 드리기 위해 몇분 빨리 왔다”며 입을 뗐다.

김 부장판사는 “이 재판에 국민적 관심이 많이 몰리고 있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법정 생중계에 관해 공공의 이익과 여러 이익을 다각적으로 비교해

촬영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판사는 “다양한 시각과 의견이 있을 수 있는 재판이지만 법정 안에서는 증거와 법리에 입각한 재판을 진행하겠다”면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재판부의 부덕함 때문이다. 성숙한 시민의 자세로 재판을 청취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전씨를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40년 전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5·18로 고통받은 많은 국민들이 있다”며 “그분들의 솔직한 심정은 피고인 엄벌도 중요하지만, 그때로 돌아가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것”이라고 했다. 전씨에게는 “지금이라도 5·18의 가장 큰 책임 있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범행으로 인해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진실이나 역사가 왜곡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난처한 순간

정확한 과실비율 정보로 명쾌한 순간

## 과실비율에 대한 올바른 정보로 교통사고 처리가 명쾌해집니다

모바일 APP, 웹사이트, 전화 상담으로 과실비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과실비율 | 과실비율 인정기준 APP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에서 검색] | accident.knia.or.kr [과실비율 정보 포털 접속 후 질문 & 사례집 제공] | 02-3702-8500 [과실비율 ARS센터에서 전문 상담인력 상담]

